

선진국 환경규제 “자유무역 저해”

전경련, 제3차 DDA 민관합동포럼 ... 선진국 규제범위 제한 촉구

환경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월21일 전경련회관에서 <제3차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을 열어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1/4분기까지 민관공동기구를 구성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럼에는 박결호 환경부 차관,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 재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해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대응방안과 WTO 5차 각료회의 협상 결렬에 따른 환경협상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국제 환경협약에 포함된다면 선진국의 환경규제 범위가 넓어지게 돼 국내무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결론짓고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가 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환경상품의 관세인하 협상 때 복수국가 간 협정이 되거나 국가 간 차별적인 관세철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결호 환경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민관합동포럼과 산하의 Working Group은 앞으로 DDA 환경협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뿐만 아니라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민관공동 대응책과 국내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무역 저해효과를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보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공동의 대응체계를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2004년 1/4분기까지 민관공동기구 및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럼 위원 중 화학산업 종사자로는 유한킴벌리 박진환 부장과 SK 정현 상무, LG-Caltex정유의 홍현중 상무 등이 참석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23>